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4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2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황운하 · 조 국
이해민 · 박희승 · 김한규
백승아 · 김준형 · 김선민
민병덕 · 신장식 · 서왕진
박은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,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,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).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1. 사업장의 근로조건
 2.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
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
 4.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
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

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,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”을 “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3(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충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

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

부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2(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사업장의 근로조건</u> <u>2.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</u> <u>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</u> <u>4.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</u> <u>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<p><u>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</u></p>

	<p><u>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,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외국 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<u>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</u>	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</u>

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(이하 “외국인 취업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2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5. (생략)

권 등에 대한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3(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벌칙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<p>제3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3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